주요 국정홍보 ❶(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윤석열 대통령

안보, 경제 협력체가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가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이 두 달 사이에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그룹 A로 추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미래세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제네시스 프로그램* 대면 교류를 전면 재개하고,
인원을 작년 대비 2배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 일본 외무성이 진행하는 한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윤석열 대통령

청년을 중심으로 한
미래세대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제네시스 프로그램* 대면 교류를 전면 재개하고,
인원을 작년 대비 2배로 늘리기로 하였습니다.

* 일본 외무성이 진행하는 한일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윤석열 대통령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실현 방안 논의 진행을 환영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한미동맹, 한일,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억제력과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더욱 논의를 심화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한국 국민의 건강과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히로시마 방문 계기에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찾아
참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사 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요 국정홍보 ❷(12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굳건한 한·미 동맹

- 한·미 동맹 70주년… 미래 발전 방향 협의
- 군사·안보·경제 등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강화'로 업그레이드

대한민국 대통령실

가치 동맹

- 10년 만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역대 7번째)
- '자유의 동맹', '행동하는 동맹' 미래 협력 청사진 제시

대한민국 대통령실

안보 동맹

- 확장억제 강화 방안 '워싱턴 선언' 문서화
- 고위급 상설 협의체(핵협의그룹) 신설

산업 동맹

- 양국 기업·기관 간 50건의 양해각서(MOU) 체결
- 미 주요 첨단산업 분야 기업 총 59억 달러(7조 9000억 원)투자 결정
- 한국 기업의 투자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 약속 (IRA·반도체과학법)

과학기술 동맹

-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나사 간 공동성명서 체결

문화 동맹

- 넷플릭스 CEO 접견
- 한국 콘텐츠 산업에 향후 4년간 25억 달러 투자 발표

정보 동맹

- 한·미 공동 재정 기여(6천만 불) 바탕 이공계(STEM) 및
인문사회 분야 청년 특별교류 프로그램 출범

주요 국정홍보 ❸(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주요 국정홍보 ❹(주가조작 사건 철저한 조사)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ntract for Difference)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 → 증거금(40%)을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관계 임원회의

금융위원회

특히, "**금번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의 제도상 보완 필요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보완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 필요 부분은 **추가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 ❶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
  ❷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에 미포함
  ❸ 종목별 매수잔량 등의 공시 미비
  ❹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관계 임원회의 ——— 금융위원회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관계 임원회의

금융위원회

주요 국정홍보 ⑥(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법률·심리 상담, 금융· 주거 지원

원스톱 안내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법무사 통한 전세 피해 관련 무료 법률 자문	전세피해로 인한 심리 회복 지원	LH·지방도시공사 공공임대 등 주거 지원 연계	저리대출, 무이자대출, 대환대출 안내 등

'이동형 전세피해 상담버스'

운영기간 '23.4.21~5.31 (12:00~20:00까지 운영)

※ 운영기간 및 시간은 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 법률·심리·주거·금융

요일 및 장소

요일	운영 장소
월	인하대 앞 (인하대역 6번출구)
화	제물포역 앞 (1번출구 남광장)
수	주안역 앞 (1번출구 남광장)
목	인천터미널 (인천터미널역 2번출구 광장)
금	시민공원역 앞 (지하도상가 9번출구, 옛 시민회관 쉼터)

부스설치가 어려운 지역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먼 지역 등에 이동형 상담버스 운영

행정복지센터 내 '상담부스'

운영기간 '23.5.1~5.31 (12:00~20:00까지 운영)

※ 운영기간 및 시간은 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 법률·주거·금융

요일 및 장소

요일	운영 장소
월	송의1.3동 행정복지센터
화	송의2동 행정복지센터
수	송의4동 행정복지센터
목	도화1동 행정복지센터
금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

전세피해 집중단지 인근 행정복지센터 등에 상담 전담부스 운영

'자택 방문 상담 서비스'

운영기간 '23.5.1~5.31 (상담수요에 따라 시간은 탄력 운영)

※ 운영기간 및 시간은 운영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 법률, 심리

복지센터	연락처
숭의1.3동 행정복지센터	032-728-6101
숭의2동 행정복지센터	032-728-6121
숭의4동 행정복지센터	032-728-6141
도화1동 행정복지센터	032-728-6281
주안1동 행정복지센터	032-728-6321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전화 예약 후
자택에서 상담 가능

‘찾아가는 전세 피해지원 서비스’

한 분도 전세 피해지원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관련 심리상담 전화는
1670-5724
(09:00~21:00, 연중무휴 운영)

주요 국정홍보 ⑥(교육개혁 3대정책 성과)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교육부

#국가책임 교육·돌봄

0세부터 11세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돌봄 실현

-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유보통합추진단 설치** ('23.1월)
  - ★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분리된 지원체계를 '아이와 부모' 중심으로 통합
-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출범** ('23.4월)
- **늘봄학교 5개 지역 214개교 시범운영 시작** ('23.3월)

교육부

#디지털 교육혁신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

- **디지털새싹 캠프 운영** ('22.12월~)
  - ★ 겨울방학 기간 중 SW·AI 체험 : 초중고 학생 18만 여명 참여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신설** ('23.1월)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방안 발표** ('23.2월)

교육부

#대학개혁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대학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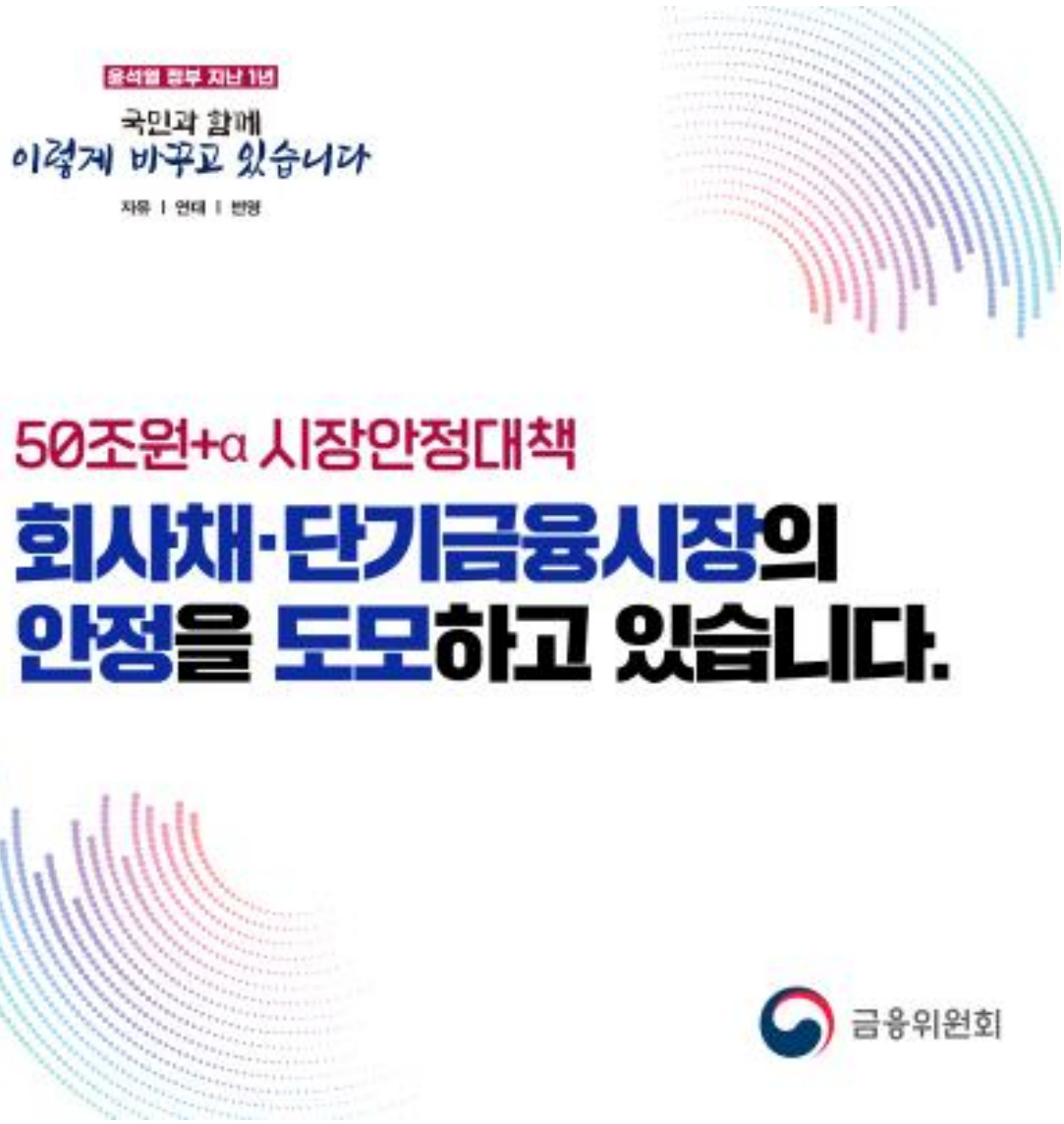
-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규제개혁협의회' 출범 ('22.9월)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도입 방안 마련 ('23.2월)
  - ★ 7개 시·도 시범지역 선정('23. 3월)
-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 확정·발표 ('23.4월)
  - ★ 6월 예비지정 → 9월 10개 내외 지정 추진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국민을 위한 교육개혁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육부

주요 국정홍보 ❼(회사채·단기금융시장 안정 도모)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2022.10.23.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변동성이 높아진 회사채시장과 단기자금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고,
시장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

주요 시장안정조치 세부내용

- ☑ **채권시장안정펀드 재가동**(가용재원 1조 6천억원 매입재개)
- ☑ **정책금융기관의 회사채·CP 매입 및 P-CBO 발행규모 확대**
- ☑ **증권금융을 통한 증권사 유동성 지원**(3조원 규모)
- ☑ **PF 사업자 보증 지원**(2023년까지 총 10조원 규모 보증 지원)

금융위원회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시장 안정을 위해 은행권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11.1. **금융위원장, 「5대 금융지주 회장단 간담회」 개최**

금융시장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❶금융시장 안정, ❷실물부문 자금공급, ❸취약차주 지원 등을 위한 금융지주회사 역할에 대해 논의

2022.11.9. **금융위원장, 「은행장 간담회」 개최**

은행권의 시장안정 역할 및 향후계획, 자금조달·운용 관련 애로사항 및 해소방안 등을 논의

2023.3.31.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단, 은행연합회장 간담회」 개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과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당부

금융위원회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통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매주	관계기관 장관급 회의	☑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 ☑ 정부 업무보고
매일	실무자 중심 현황 점검회의	☑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 회의 ☑ 은행권 금융시장 점검 회의(실무 TF 등) ☑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시장 점검회의 개최 ☑ 금융지주회사 시장안정 점검회의 ☑ 자금시장 관련 현황 점검회의 개최 ☑ 보험업권 간담회

금융위원회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부동산 PF 연착륙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2023.3.6.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개최**

❶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동향 및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❷ 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
❸ 「부동산 PF 대주단 협약」 개정방향
❹ 민간 사업재구조화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

2023.4.27. **전 금융권이 함께 하는 「PF 대주단 협약」 개최**

전 금융권의 부실·부실 우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독려, 각 금융협회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

▶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만기연장, 채무조정, 신규자금 지원 등 재무구조 개선에 신속하게 합의 가능

금융위원회

50조원+α 시장안정대책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대한 면책특례도 적용했습니다.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책임있는 금융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22.11.4.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대한 면책특례 적용**

「10월 23일 시장안정대책」, 「11월11일 PF-ABCP·CP 시장 추가 지원방안」 등

금융지주	95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은행	은행채발행 최소화, RP매수 등

금융위원회

주요 국정홍보 ⑧(한부모가족·청소년 정책 성과)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국민과 함께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지켜드립니다

☑ **청소년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2.6월), 학교안팎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22.10월),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22.11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22.12월) 등

☑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특화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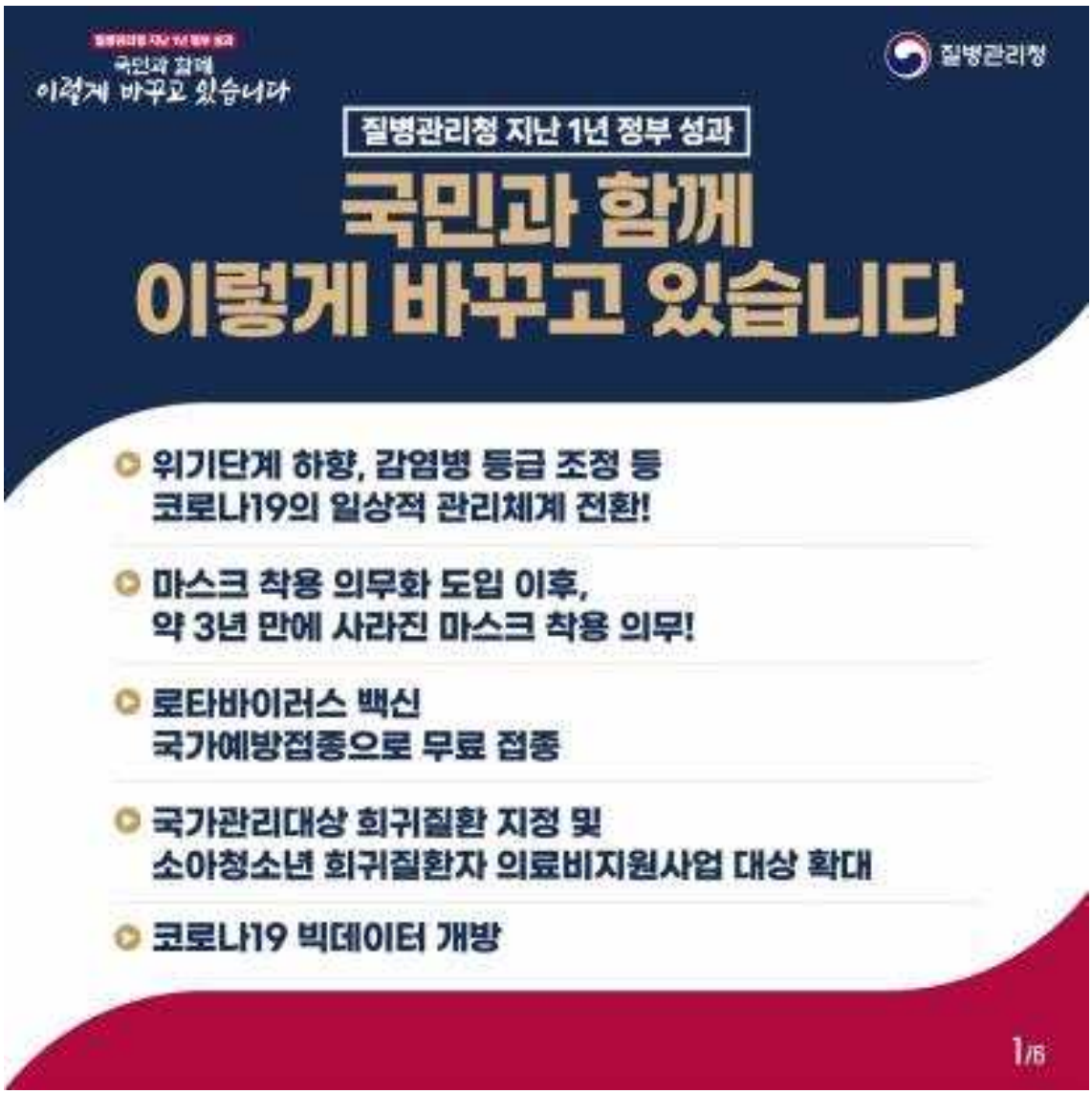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240개소)에서 '집중심리클리닉' 운영('23.3월~)
-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17개소)에 임상심리사 배치('23.7월~)

☑ **위기청소년 발굴 및 자립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 | 함께나 든든한 가족

주요 국정홍보 ⑨(질병관리청 1년 정부 성과)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2023. 5. 2.

질병관리청

위기단계 하향,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체계 전환!

국민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접종 참여, 범부처·지자체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한 결과, 일상회복 로드맵을 발표('23.3.29.)하였습니다.

일상회복 로드맵 단계별 주요 내용

1단계 위기단계 하향(심각→경계) 및 방역조치 전환 준비

- 위기단계 하향, 격리기간 단축(7일→5일), 통계발표 주기 전환(일→주)

2단계 감염병 등급 조정 및 방역조치 전환

- 실내 마스크·격리 의무 권고 전환, 검사비·치료비 등 지원체계 점진적 조정, 치료제·백신 접종 지원 유지

고위험군 집중 보호로 코로나19 위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 적극적인 백신접종과 치료제 처방 노력으로,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중증화율과 치명률 감소

중증화율(%)	('20.5.) 3.76	→ ('23.3.) 0.18
치 명 률(%)	('20.5.) 2.1	→ ('23.3.) 0.09

2023. 5. 2.

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이후, 약 3년 만에 사라진 마스크 착용 의무!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및 대응역량, 면역수준과 마스크 착용에 대한 국민인식수준 등을 고려해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이후,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주요 조정 경과

시기	구분	변경 내용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2년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
2023년 1월 30일	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2023년 3월 20일	**일부 의무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을 제외한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2023. 5. 2.

질병관리청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으로 무료 접종

2023년 3월 6일부터 부모님들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생후 2~6개월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도입**하였습니다.

* 로타텍 3회, 로타릭스 2회 경구투여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의 설사, 구토, 발열 등을 유발하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로,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으며, 로타바이러스 백신은 대규모 임상 시험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습니다.

※ 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시행 중

2023. 5. 2.

질병관리청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및 소아청소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확대

희귀질환의 체계적 관리와 **의료비 부담 경감 등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을 1,123개에서 **1,165개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지정 희귀질환 환자들은 **건강보험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90% 감면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130% 미만으로 확대**) 및 재산기준 충족 대상자에 대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후 나머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 목적에 한해
유관기관에만 관련 정보를 제공해온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 해석 및 건보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민간대상 연구* 목적의 빅데이터 개방을 확대하였습니다.

- **가천대**
  -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후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도에 대한 분석 연구

고려대 구로병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추적 감시 및 결과 분석

국립암센터
- 연령에 따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감수성 조사 등

주요 국정홍보 ⑩(한국인 원폭 희생자 공동참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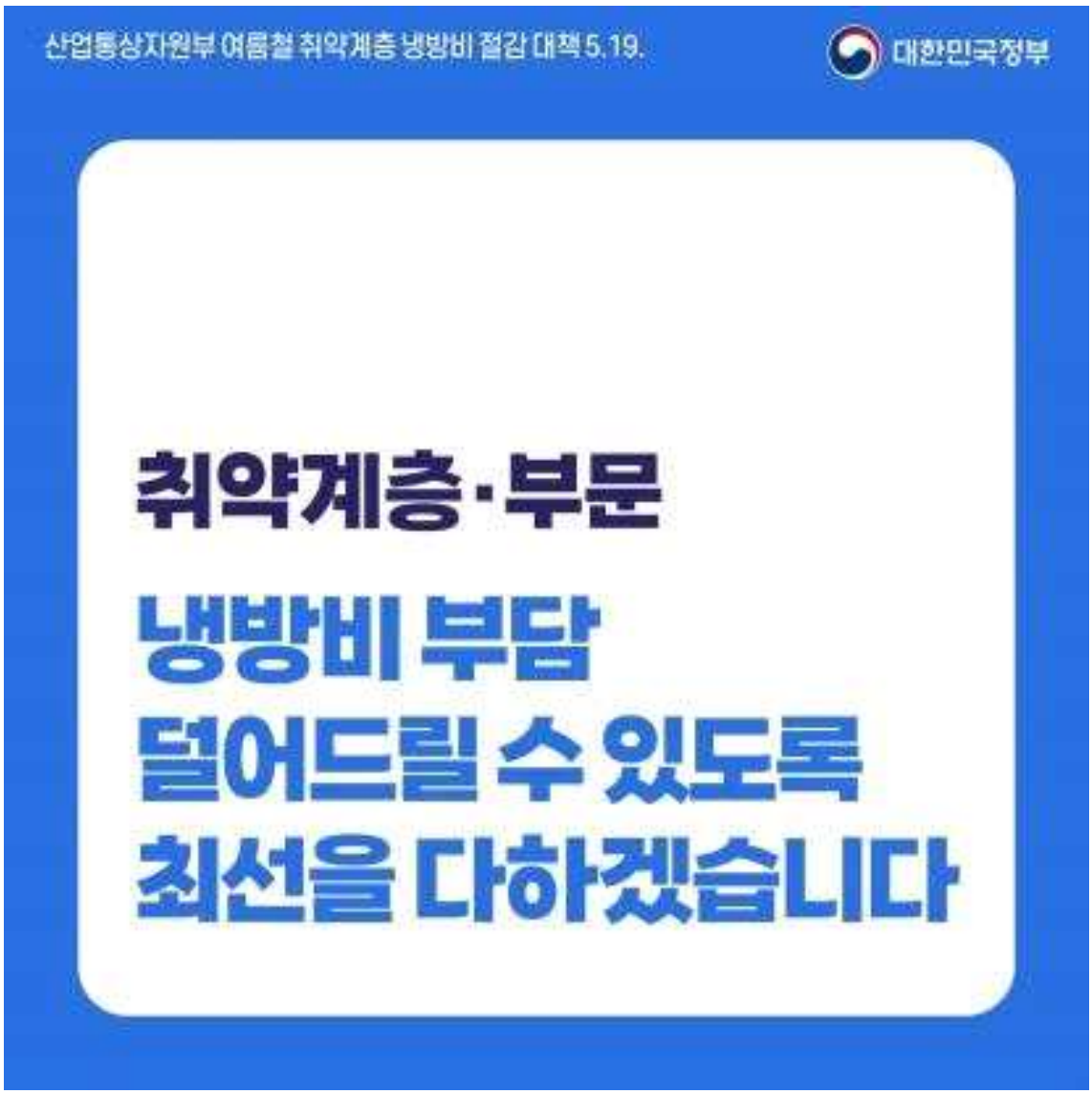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주요 국정홍보 ❶ (한·캐나다 수교 60주년)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주요 국정홍보 ⑫ (취약계층 냉방비 대책마련)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대한민국정부

많이 나온 요금 나눠내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분할납부

전기 요금 **50%** 이상 납부 후
내지 못한 **잔액 3~6개월 분납**
('23년 6~9월)

대한민국정부

전기 요금 지원해드려요

에너지 바우처 확대

지원 대상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확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더위·추위 민감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장 등

지원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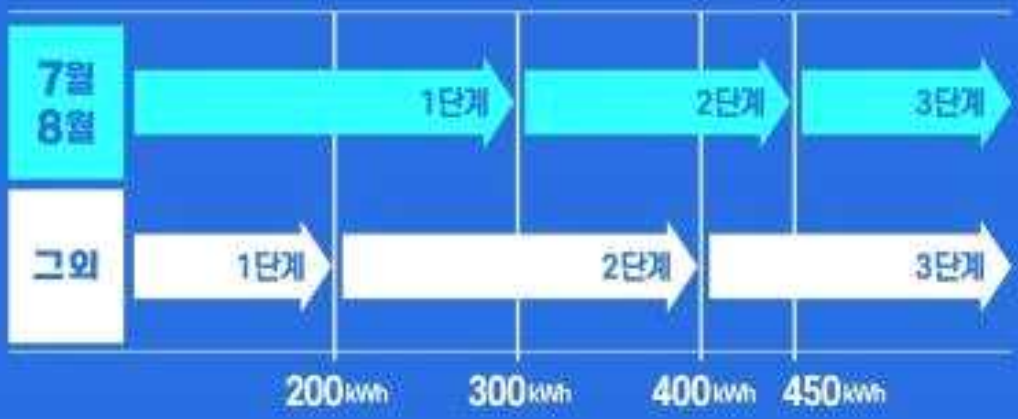
기존 여름철 평균 지원단가 4만 원('22년)

상향 4.3만 원, 7.5% ↑

대한민국정부

전기 얼마나 썼지?
걱정 덜어드려요

7~8월 전기 누진구간 확대



*누진 단계가 낮을수록 전기 요금이 적게 책정

대한민국정부

전기 요금 부담 줄여드려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 대상으로 인상요금 적용 유예

복지할인 대상자 평균 전력사용량인 313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인상 단가 적용

*가스는 지난 동절기 실제 사용액 고려해 지원 적정 수준 검토 중

대한민국정부

낡은 시설·설비 새것으로 교체 지원해드려요

저소득층

4만 9천 5백여 가구 **고효율 에어컨·보일러 지원**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10 → 20% 상향** (최대 30만 원)

소상공인·농어가 등

냉·난방 효율 높이는 시설 **설치·교체 및 자재 지원**

주요 국정홍보 ⑯ (원전 기술개발·인재양성 로드맵)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산업통상자원부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2023년 5월 15일)

*2조 9000억원 규모 계약 체결(2023년 3월)

2조원 규모 보조기기 발주도 5월 시작

국민과 함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5년간 2조원

원전산업 연구개발(R&D) 추진

미래 대비 관점

차세대 원전* 시장 선도 위한 기술개발 중점 지원

* 소형모듈원자로(SMR), 소듐냉각고속로(SFR), 초고온가스로(VHTR), 용융염원자로(MSR) 등

시장 관점

원전 수출경쟁력 강화 위한 기술개발 추진

확산 측면

원전 활용 다변화 기술*에 대한 지원 강화

* 원전 활용 청정수소 생산기술, 재생에너지 연계 최적화 시스템, 열 직접 공급 기술 등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 전문인력 4500명 양성(~2030년)

석·박사급 고급인력	학사급 전문인력	현장 맞춤형 실무인력
1000명	1000명	2500명

※ 이외에 원전공기업 인력 확충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력이 안정적·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기반도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원전 수주 성사와 기자재 수출 지원 등을 통해
일감을 지속 창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개발·인력양성을 포함,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과 지원으로
기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한·독 교류 140주년

첨단산업 등 양국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합니다

전쟁과 분단의 아픔 속에서 경제성장을 이루며
특별한 유대감을 쌓아 온 양국.
달라진 시대 환경에 따라 협력을 강화합니다.

- 기후위기 극복 협력
- 견고한 교역·투자, 첨단분야로 확대
- 북한 비핵화 긴밀 공조
-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국방 협력

주요 국정홍보 ⑭ (초등돌봄교실 대기 적극해소)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교육부

초등돌봄 대기를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지역·학교별 여건 고려

- 돌봄교실 증실 · 교실당 학생수 탄력적용
- 아동친화적 복합공간으로 리모델링

다양한 인력 활용

- 돌봄전담사, 퇴직교원, 실버인력, 학부모 등
- 법적근거 마련

지역자원 연계·협력

- 복지부, 여가부 등 범부처 협력
- 거점형돌봄센터 구축 ('23년, 7개 이상)

학생·학부모 불편해소를 위해 가용자원 총동원

교육부

프로그램 질적개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초1 에듀케어 확대

- 최대 1학기 → 최대 1년
- 시도별 자체 에듀케어 도입사례 확산

방과후 1+1 도입

- 희망하는 학생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추가로 무상제공

대학·민간·체험센터 연계

-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대학생 멘토링, 진로체험 등

중앙-지자체-학교 거버넌스

- 지역단위 협의체 활성화
- 지역별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실태조사

우수 프로그램 공급처 ↑, 학생 방과후학교 참여 ↑

교육부

누구나 누리는 교육·돌봄을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 중심

단계적 확대

앞으로 희망하는 모든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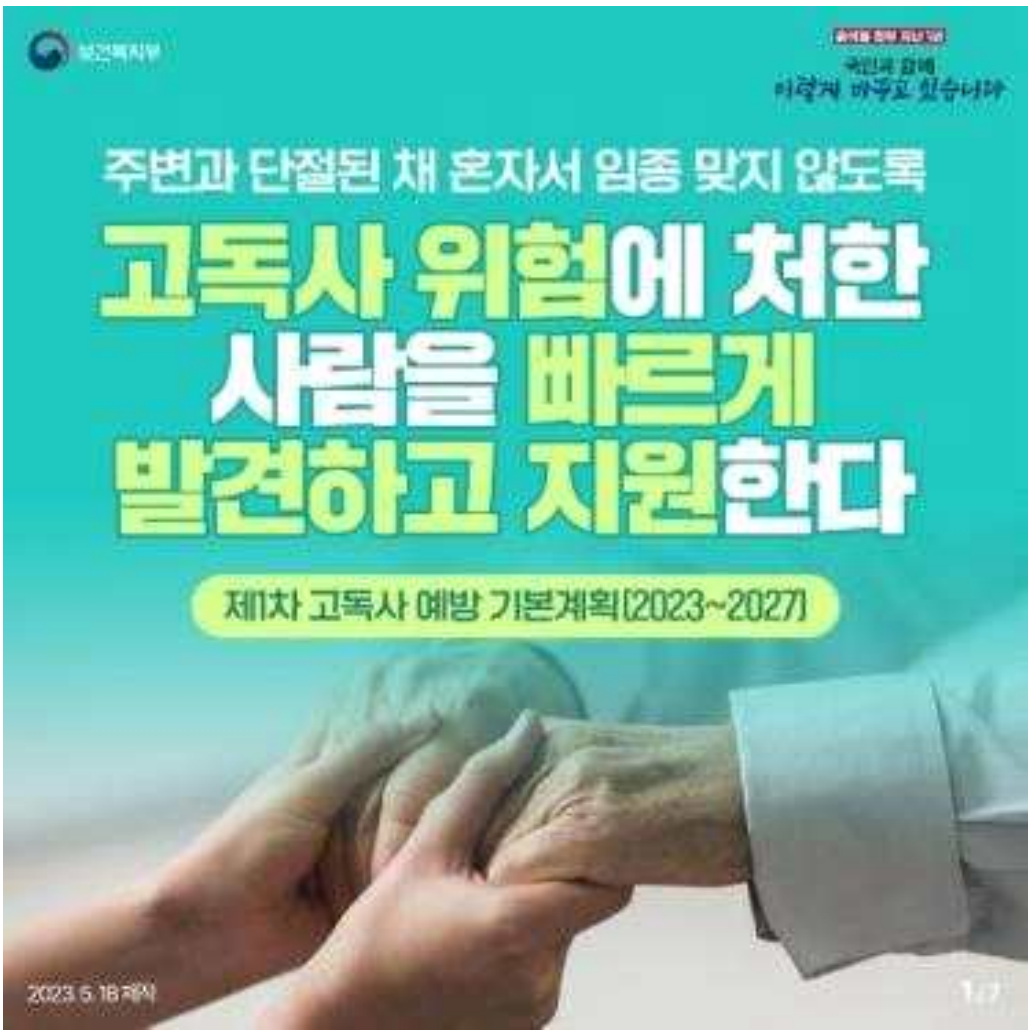
• 단계적 로드맵 수립 • 재정지원 실시 • 정책연구, 현장 의견수렴

늘봄학교 에듀케어 전국확산과 연계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www.moe.go.kr

주요 국정홍보 ⑯ (고독사 위험 빠른 발견과 지원)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보건복지부

고독사 위험에 처한 사람을 일상생활 속에서 빠르게 찾아냅니다

- 지역주민·지역밀착형 상점이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역할 수행
-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신고체계 구축
-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발굴 조사 강화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해 고독사 위험군 발견

보건복지부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을 공동체와 연결합니다

- 고독사 취약 지역 내 **공동체 공간** 조성 및 **교류 프로그램** 운영
- 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활용해 **인문상담, 예술·체육** 참여 유도
- 지역별 **가족센터**를 활용해 **1인 가구의 모임·활동** 등 지원
-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연결, 정서지원, 응급상황 감지·대처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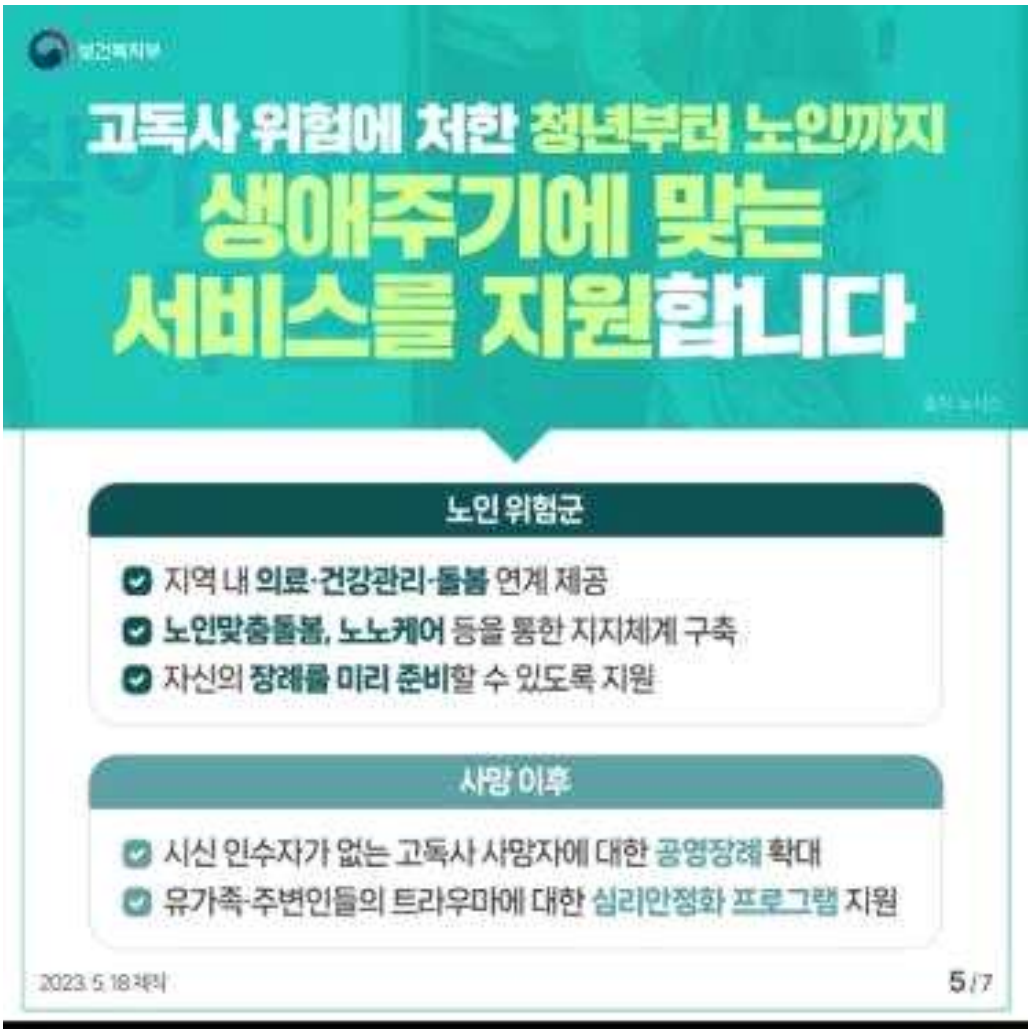
고독사 위험에 처한 청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청년 위험군

-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으로 단축
-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청년도전 지원사업 연계 등 취업 지원

중·장년 위험군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생활습관 개선
- 돌봄, 병원 동행 등 생활지원 서비스 신설
- 재취업 프로그램 및 건강관리·안전 등 평생교육


보건복지부
고독사 위험에 처한 청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노인 위험군
지역 내 의료·건강관리·돌봄 연계 제공
노인맞춤돌봄, 노노케어 등을 통한 지지체계 구축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사망 이후
시신 인수자가 없는 고독사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확대
유가족·주변인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심리안정화 프로그램 지원
2023. 5. 18. 제작
5/7

보건복지부

고독사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갖춥니다

-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기관**을 중앙·지역별로 지정
- **고독사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사망자 분석 및 위험군 발굴
-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해 **지역 주도형 대응체계** 구축
- 고독사 **실태파악 주기**를 5년→1년으로 **단축**
- **사회적 고립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대국민 공감대 형성

2023. 5. 18. 제작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23. 5. 18 게재
7/7

주요 국정홍보 ⑯ (국민 일상이 안전한 사회 구축)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행정안전부

① 플랫폼 기반 데이터 통합관리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재난관리 및 대응 역량 강화

-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1단계 사업 완료 · 오픈('23.3.13.)
  - 10개 재난유형에 대한 재난안전데이터 수집 · 연계 및 제공
    *오픈 시에 개방된 데이터를 민간기업에서 재난 상황 판단에 활용

-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2단계 사업 추진('23.6.~)
  - 재난안전데이터 확대, 데이터 표준화 · 품질관리 강화 등

행정안전부

② 긴급신고 바로앱 대국민 서비스

112·119 신고 기능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통합 제공

112·119 신고 기능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통합 제공

- 범죄, 화재, 구조·구급, 해양사고 등 신고 유형에 따라 경찰, 소방, 해경 어느 기관으로든 한 번에 신고 가능
- 상황에 맞는 그림·문구를 선택하여 편리하게 신고
- 다문화 가족,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신고 기능 제공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③ ICT 기반 인파관리

재난 예측과 감지를 강화,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 체계 마련

-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방안 수립('22.11.)
-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알고리즘 기준마련*」 용역 추진 ('22.12.27.~'23.3.30.)
  * 인파밀집 분석방법, 인파밀집도 산정식, 밀집도별 위기경보 기준 마련
-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23.5.~12.)
  - ① 데이터 수집, ② 모니터링(위험 분석), ③ 알림 전달 기능 개발 등

행정안전부

④ AI 기반 스마트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체계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 서울 일부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시범운영*을 거쳐 스마트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

* 서울 서초구 세림초, 서초초 및 영등포구 당중초 인근 보호구역 내 시범운영('23.6월~)

행정안전부

⑤ CCTV 기반 스마트 관제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

재난 예방 · 관리 목적 공공 CCTV 정보 활용 근거 마련

- CCTV 영상정보를 대응단계 뿐만 아니라 예방 · 대비 단계에서 활용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지자체 CCTV 영상을 경찰·소방과 공동활용 확대

- 전국 CCTV 통합관제센터와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국토부) 및 재난관리시스템(행안부) 간 연계 확대

위험 징후를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CCTV 관제체계로 전환

- 연내 지자체 운영모델 마련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예정

※ 현재 관제요원 1인당 약 360여대 관제 中

⑥ 재난안전산업육성

재난안전 분야 재난안전산업 육성 적극 추진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정법」 시행('23.1.5.)
- 재난안전산업 육성 기반 조성
  - 재난안전산업 육성정책 추진방향 마련('23.3.)
  - 재난안전산업 진흥 5개년('24~'28년)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재난안전 기술 · 제품 경쟁력 제고
  -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범위 확대 운영(사회재난 기술 포함)
  -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R&D) 추진('23.4.~)
- 재난안전기업 판로개척 지원
  - 재난안전기업 상반기 수출상담회 개최(4.24.~28.)
  - 해외 재난안전분야 박람회에 한국 공동전시관 설치 · 운영 추진

주요 국정홍보 ⑰ (중소·벤처·소상공인과의 동행1년)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손실보전

01 취임 직후 발빠른 행보,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해 현장을 누비다

-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추경**으로 **편성**
- 추경 통과 다음날부터 지급을 개시하여 이틀 만에 **17조 3천억원, 예산의 75%**를 **지급**하는데 성공

손실보전금 추경 편성

지급개시 이틀 만에

동행축제

02 동행축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온 국민의 소비축제로 자리매김하다

- '7일간의 동행축제'를 계기로 온국민이 함께 즐기는 상생소비축제로 확대
- 12월의 '윈-윈터 페스티벌'까지 합하면 **2차례 동행 축제**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은 간접·직접 매출을 더할 때 약 **1조 5천억원** 달성

7일간의 동행축제

+

윈-윈터 페스티벌

=

1조 5천억원

이태원 살리기

03 슬픔을 넘어 다시 일어서는 이태원,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로 비상을 꿈꾸다

- 이태원 상권이 다시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 추진
- 이영 장관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안한 **이태원 회식 챌린지**는 서울시장, 주한 아일랜드 대사 등 유명인사들이 참여하며 **이태원 상권 살리기 기여**

정책금융 지원

04 복합위기의 극복을 위해 대규모 정책금융을 신속하게 지원하다

- 3고 복합위기, SVB 사태에 따른 벤처자금 시장 위축 등 중소기업 **금융애로**가 우려될 때마다 **선제적 대응**으로 유동성 공급
- 9월말 종료 예정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하고,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출발기금'** 출범
- '23년 1월 **복합위기** 대응 **정책금융 80조원** 공급방안, '23년 4월 **벤처·스타트업** 대상 **10.5조원 추가 자금** 지원방안 발표

납품대금 연동제

05 14년간의 두드림, 드디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문을 열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처음 논의 시작된 이후, **14년 동안**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

'22년 6월, 이영 장관 주도 '민관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TF' 구성
국회, 관계부처, 대기업 등과의 협의 과정 통해
'22년 12월에 **법제화 성공**으로 14년간의 두드림 결실

벤처제도 개선

06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시장 중심의 벤처생태계로 재편하다

- 벤처기업이 **대규모 지분투자**를 받을 경우, 창업주의 **지분율 희석**으로 경영권 안정성 불안. 이에, '20년부터 복수의결권 제도 본격 논의 시작되었지만 진전 못함
- 벤처기업인 출신 이영 장관이 직접나서 의원들 설득했고 '23.4월, 법안발의 3년만에 복수의결권 법안 국회 통과. 벤처기업이 **경영권 걱정 없이 투자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 마련

규제혁신

07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기업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다

- '23년 5월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도입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을 발표, **연내 2~3곳** 조성 착수 결정
- 글로벌 혁신특구는 대학, 연구소 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로서 글로벌 표준에 맞는 실증·인증·허가 체계와 함께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환경** 제공

스타트업 성과

08 영업사원 2000.0명, '무명의 수출용사'와 함께 세계시장을 개척하다

-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은 어려운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수출 1,100억 달러 이상 달성하며 우리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것을 증명
- 이영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계 곳곳을 직접 찾았으며, ①뉴욕에서 **2.2억 달러 글로벌 펀드 조성 합의**, ②보스턴에서 **랩 센트럴과의 MOU 체결**, ③중동에서 **두바이에 1호 GBC 개소** ④사우디에서 **사우디 정부측의 GBC 공간 무상 제공** 합의 등의 성과를 올림

스타트업 성과

09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진출을 위해 유니콘 날개를 달다

- **벤처·스타트업 정책 고도화**를 위해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22.9),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22.11),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22.11) 등의 대책 발표. 그 결과 우리 **벤처·스타트업 세계에서도 인정**받으며 활약
- **CES 2023**에서 우리 창업·벤처기업 **111곳**이 **혁신상**을 수상
- **BIBAN 2023**에서는 우리 스타트업이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기록

소상공인

10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다

- **보호지원 일변도**였던 **소상공인 정책 패러다임**을 **"기업가 정신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으로 전환
-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혁신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책방향 설계**

향후 핵심정책 과제

첫째, 창업·벤처 분야

①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수립
②핵심규제를 100개 선정하여 하나씩 해결
③글로벌 혁신특구를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
④실효성 있는 기술보호 방안 수립(SW 가치 인정 시장여건 마련)

둘째, 중소기업 분야

①디지털화 촉진 전략 수립
②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
③해외진출 지원거점 확대, 전문인력 확충
④지역주력산업 개편과 연동하여 지역대표 중소기업 300개 육성

셋째, 소상공인·상생 분야

①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추진
②위기·폐업·재기 상황을 촘촘히 지원하는 경제 안전망 확충
③대기업·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상생 프로젝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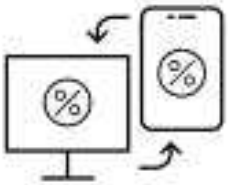
주요 국정홍보 ⑱ (국가보훈처 규제혁신 핵심성과)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주요 국정홍보 ⑲ (금융분야 국정과 주요 성과)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00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저금리 대환대출

새출발기금

기준금리 상승 등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대출·보증**(9조 7,000억원)을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대폭 낮췄습니다.**
2022년 10월에는 '**새출발기금**'을 출범하여 원리금 감면, 거치기간 부여, 장기분할상환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추진 중입니다.**

* 2023년 2월 기준 2조 8,000억 원 규모(18,984명) 신청접수

금융위원회

009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
LTV 80%까지 완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단일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LTV 30%까지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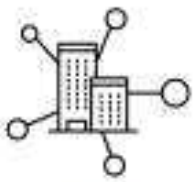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한 대출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습니다.

금융위원회

018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ESG 공시제도 개선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 개시



기업구조 혁신펀드

급변하는 글로벌 ESG 환경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고, ESG 금융추진단을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자금공급 산업 분야를 결정하던 기존 방식을 개편하여 정부부처가 산업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설정한 국가산업전략에 맞춤형으로 정책금융을 공급함으로써 실물경제 지원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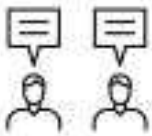
금융위원회

034 미래 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 수립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예외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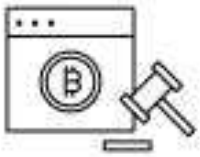


금융규제혁신회의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감독관행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균형있게 달성하기 위한 빅테크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금융보안 규제와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선해 데이터 활용을 촉진했습니다. 7차례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와 금융·비금융 융합을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원회

035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추진
(관련 법률 제·개정안 19건 발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 개선 방안 발표

NFT 활성화 등을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시장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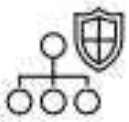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우선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토큰 증권이 자본시장 규율체계 내에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국내 코인 발행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금융위원회

0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합리화

불법 공매도 근절 및 공매도 운영 개선



물적분할 상장 시 주주보호 제도화

상장폐지제도 개선

의무공개매수 검토 등 내부자의 무제한 자본매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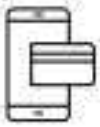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공정한 주식시장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불법공매도 적발을 강화하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확대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3월에는 그간 과태료 또는 주의 조치 등으로 처분하였던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037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향상

예대금리차
공시 시행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 가이드라인 마련

은행의 모바일
공인인증서 사용 확산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펫보험
활성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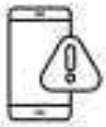
국민생활을 더욱 든든하고 편리하게 만드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금융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금융위원회

063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 출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TF를 출범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하여 소송구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090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0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
LTV 80%까지 완화

DSR 산정시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활성화 병행

청년도약계좌 출시
(6월 예정)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일정한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기 5년의 자유적립식 적금상품으로, 적금금리에 더해 본인 납입금에 따른 정부기여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금융위원회

주요 국정홍보 ㉑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주요 국정홍보 ❹ [전세사기 보증금 5억원으로 확대]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지원대상> 면적 관계없이 보증금 5억원으로 확대

보증금 규모 확대

기존	개정
✓ 대상주택 면적(85㎡) 요건 O ✓ 보증금 최대 4.5억원	✓ 대상주택 **면적 요건 삭제** ✓ **보증금 5억원으로 확대**

피해 규모 삭제

- 보증금의 '상당액' 손실발생 예상 규정 → **삭제**

법무사가 경·공매 대행
수수료 70% 지원

✔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지원

✔ 경·공매 시, 피해 임차인 거주 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지원

✔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피해자
✔ 최우선변제금 지급 못받는 피해자

최장 **10년 간**
무이자 대출

구입·전세자금 지원

거주주택 경락 또는 신규주택 구입 시, **금융지원 강화**된 **정책모기지** 제공

요건	디딤돌 대출 內 전용상품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소득/한도	7천만원 이하 / 4억원	제한 없음 / 5억원
금리	**소득별 1.85~2.70%**	**3.65~3.95%**(우대형 기준)
만기	최장 30년	최장 50년
거치기간	**현행 최대 1년 → 최대 3년**	**현행 없음 → 최대 3년**

최대 6~12개월

월 162만원(생계비)·월 66만원(주거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 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원/월 >	162만원	1회 300만원 이내	월 66만원	고등 21만원 (분기별)
	(최대 6개월)		(최대 12개월)	(최대 4분기)

*긴급복지지원(4인 가구 기준, '23년)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
- **신용정보 등록 유예** 가능

달라지는 전세사기 특별법 한 눈에 보기 ①

구분	당초 (김정재의원안)	현재 (수정안 포함)
대상 요건	① 대항력 등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 확정일자	- (좌 동) - (좌 동) - 선박사기 등 대항력이 없는 경우도 특별법에 따른 금융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② 서민주택 기준 - 면적 고려 - 보증금 고려	- (삭 제) - 보증금 3억원 이하 (위원회에서 시·도별 및 피해자 여건 등 고려 4.5 ·5억원까지 조정 가능)
	③ 고의적 갭투자 - 채무 불이행 의도를 의심할 만한 이유 - 수사개시 등	- (좌 동) - 수사개시, 임대인등의 가압, 반환능력 없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 반환능력 없이 다수주택 취득·임대 등
	④ 보증금 상당액 손실 - 보증금 상당액이 미반환 - 보증금 상당액의 손실발생 예상	- (삭 제)

달라지는 전세사기 특별법 한 눈에 보기 ②

구분	당초 (김정재의원안)	현재 (수정안 포함)
조세채권 안분	-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저법주택별로 안분	- (좌 동) - 보증금 5억원 이상도 포함 (동일 임대인과 계약한 임차인의 경우)
우선 매수권	- 피해자는 경·공매에서 우선매수 가능	- (좌 동)
LH 매입	- 피해자는 LH 등에 매입신청 가능	- (좌 동)
경공매 대행	- 경·공매 유예 및 정지 신청 가능	- (좌 동) -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제공 (대행 수수료 HUG 부담비율 50%→70% 확대)
최우선변제금	미포함	- 최우선변제금 미지급 피해자에 대한 무이자 최장 10년 전세자금대출 지원 (현행 최우선변제금 기준, 소득·자산요건 면제)
신용회복	미포함	-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환의무 존속 전제로 20년 간 연체정보 등록 면제
긴급복지	미포함	- 전세사기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비·주거비 등 지원

전세사기 특별법은 공표 즉시 시행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주요 국정홍보 ㉒ [녹색·에너지 인재 10만명 양성]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주요 국정홍보 ㉓ (불법사금융 피해 적극 신고하세요)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정부는 2023.5.25.(목)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하여

- **불법사금융 수사·단속 실적 및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실적** 등을 점검하고,
  신종 수법을 동원하여 진화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 **관계기관 협조 체계를 보다 공고히하여 신속히 적발·단속**하는 한편,
- **불법사금융 대응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 최근 3년간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실적 및 대응현황

<신고상담실적>

<대응 현황>

수사의뢰 등	495건
채무자대리인	4,510건
서민금융상품	1,892건

* 이등록 대부,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 고금리·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우려)자에 대한 피해구제

* 햇살론, 新저신용자특례보증, 소액생계비대출 등

☑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10.31.)을 운영**하고, 신고·제보를 통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범죄를 신속히 적발하고 차단할 계획

신종 수법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경찰청·지방자치단체·금융감독원과 협업하여 **불법금융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및 불법대부광고 차단 등 조치**를 실시
- 인터넷 불법광고 삭제 및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조치를 보다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
- 불법사금융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온라인대부중개(광고)사이트에 대한 단속 강화**

불법사금융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접점 및 불법사금융 주요 유통 경로 등에 **불법사금융 대응 및 피해자 구제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제공**되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

- 나날이 진화하는 신종 **불법사금융 피해사례 및 신고·구제방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온라인(유튜브, 블로그 등) 및 오프라인(지하철, KTX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전파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❶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명심하세요!
❷ 거래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합니다!
❸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발생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세요!
❹ 소액·급전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❺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시 **유사수신 행위**를 **의심**하세요!

불법사금융 피해가 의심된다면?

☑ **전화 신고·상담** : 국번없이 1332 (3번 선택)
☑ **인터넷 신고** :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주요 국정홍보 ㉔ [첨단전략산업 초강대국으로 도약]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산업통상자원부

"압도적 제조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 전략적 투자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구축

- 첨단산업 민간 프로젝트(550조원 이상)에 정부 인센티브 집중
- 인허가·인프라 등 지원 강화 ⇒ **속도감 있는 투자 촉진**

☑ 신속한 입지 제공 및 전주기 산업 생태계 확보 지원

- 총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
- 국가첨단전략산업 주요 거점을 '특화단지'로 지정

☑ 기업이 체감 가능한 규제혁파로 투자환경 개선

-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 도입 ⇒ **첨단산업 규제해소 적극 추진**
- 기업규제지수 개발 및 첨단산업영향평가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인재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국가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 마중물 투입 및 산업과의 연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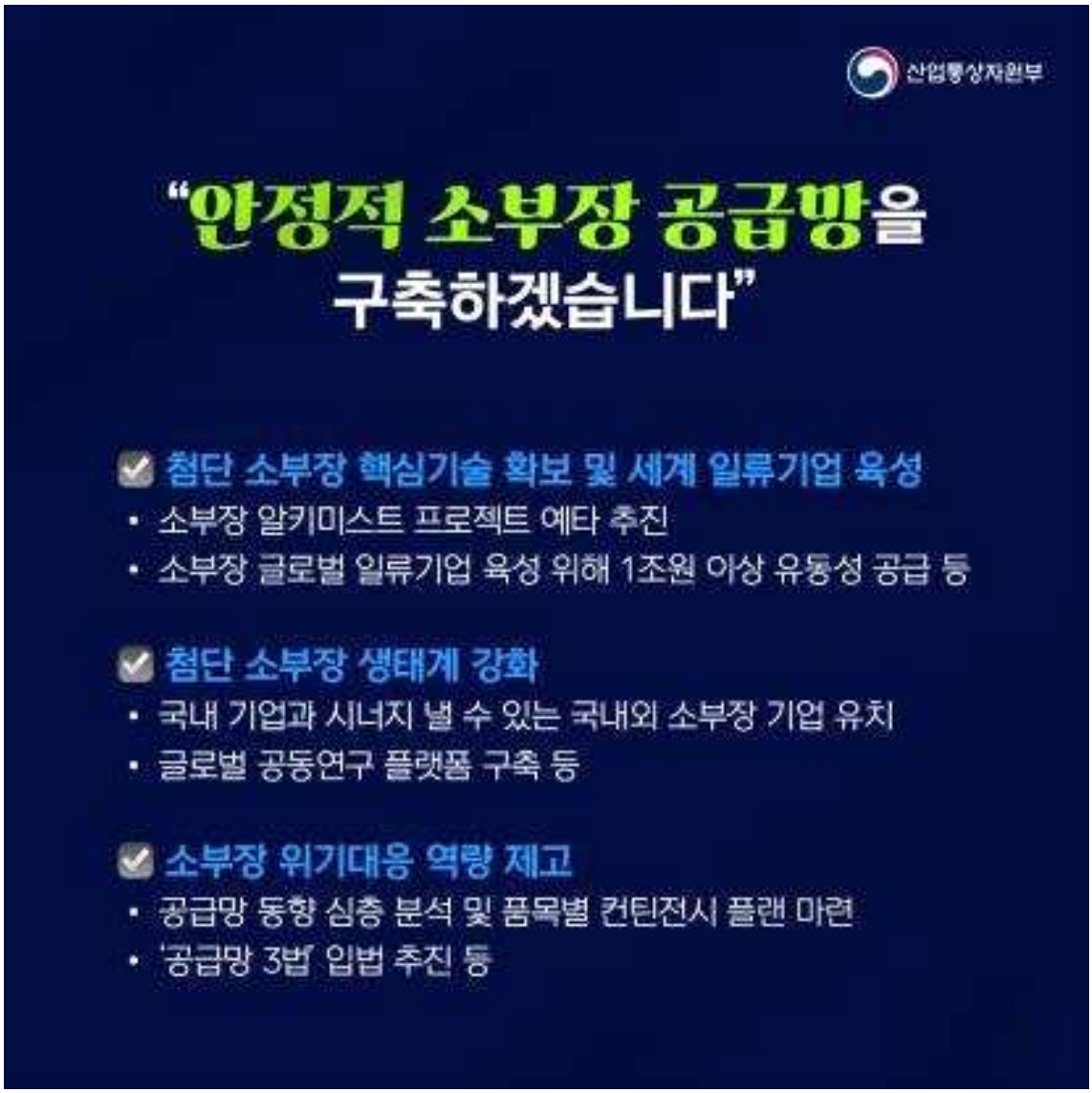
- 경제안보 중요성이 큰 산업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
- 첨단산업 핵심기술에 4조 6000억원 규모 연구개발 지원 등

☑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대학·기업 역량 결집

- 산업계 주도 혁신인재 양성(업종별 아카데미, 사내대학 활성화 등)
-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 ⇒ **석·박사급 우수인력 육성 등**

☑ 첨단기술·우수인력 해외유출 방지 위한 보호조치 강화

- 기술 수출·이전 및 해외 인수합병(M&A) 시 산업기술보호법상 심의 절차 적용
- 전문인력 지정제도 운영 ⇒ **우수인력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


산업통상자원부
"안정적 소부장 공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첨단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 및 세계 일류기업 육성
• 소부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에타 추진
• 소부장 글로벌 일류기업 육성 위해 1조원 이상 유동성 공급 등
첨단 소부장 생태계 강화
• 국내 기업과 시너지 낼 수 있는 국내외 소부장 기업 유치
• 글로벌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 등
소부장 위기대응 역량 제고
• 공급망 동향 심층 분석 및 품목별 컨틴전시 플랜 마련
• '공급망 3법' 입법 추진 등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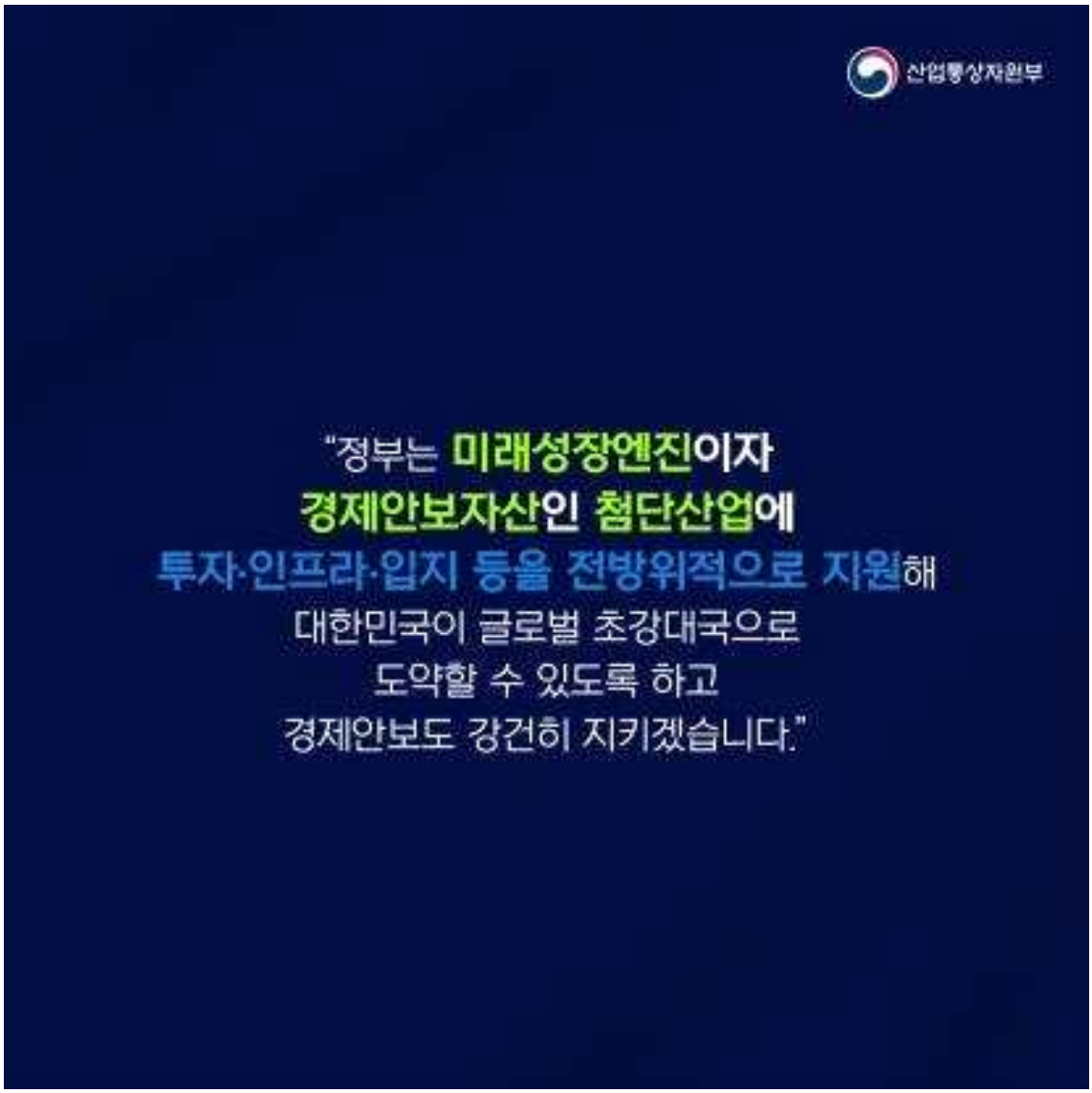
"국가 총력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첨단산업 3대 통상전략(기술·공급망·그린) 추진

- 기술강국과 공동 기술 프로젝트 발굴 및 확대
- 첨단산업·공급망 글로벌 협력 채널 활성화 등

☑ 신속하고 종합적인 거버넌스 구축

- 현행 '기술조정위원회'를 '첨단산업조정위'로 개편
- 산업연구원 내 '첨단산업전략센터' 설치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미래성장엔진이자
경제안보자산인 첨단산업에
투자·인프라·입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안보도 강건히 지키겠습니다."

주요 국정홍보 ㉕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법무부는

①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및

②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 '23. 5. 25.~'23. 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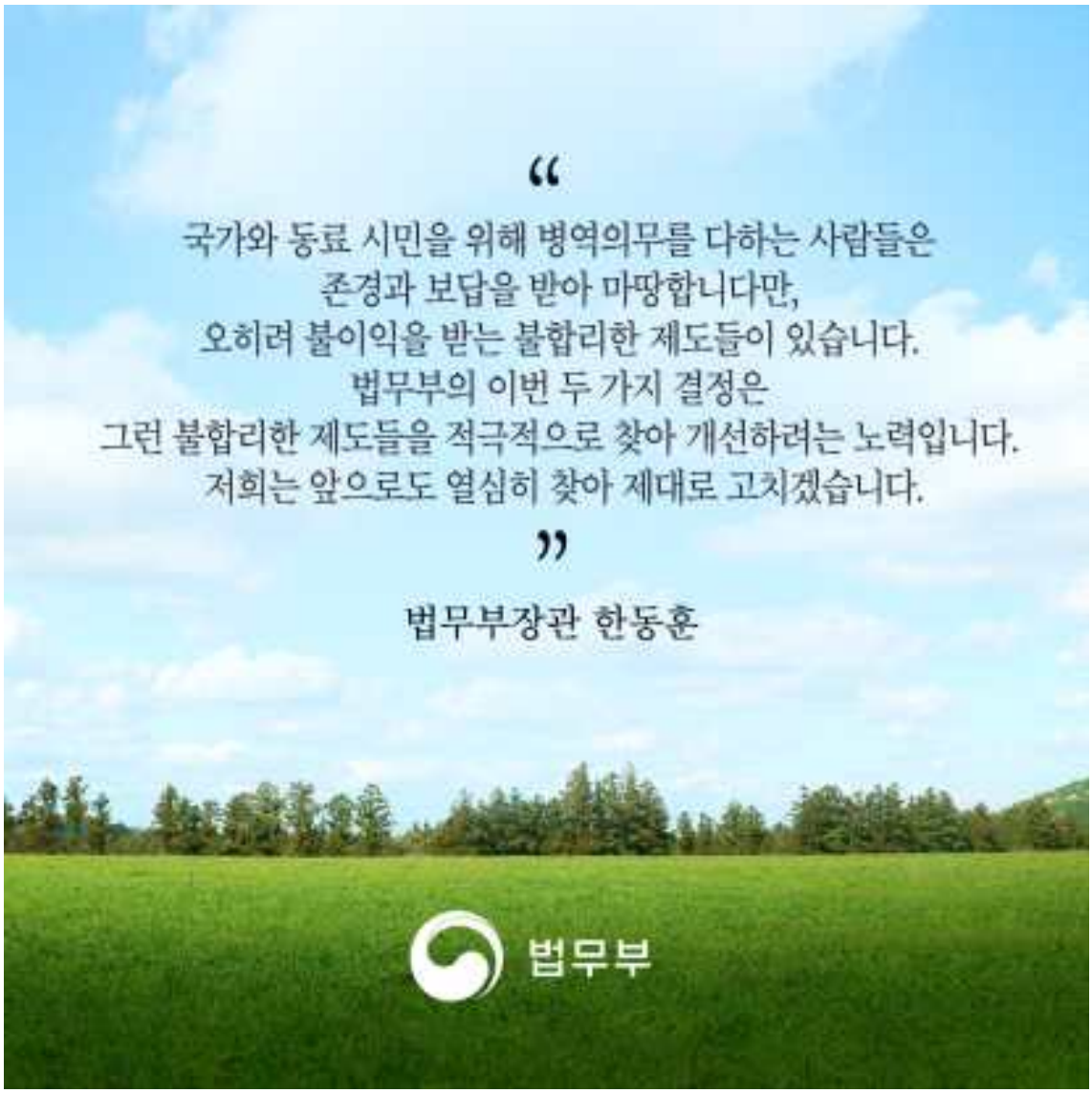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현재는 국가배상액 산정 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군복무기간을 전부 취업가능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 기존에는, 예를 들어 각각 9세인 남학생과 여학생이 사망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남학생에 대해서는 군복무 예정기간(18개월)이 향후 취업가능 기간에서 제외됨에 따라 **여학생보다 약 2,600만원 가량 배상금이 적게** 책정되어 왔음

[국가배상법 개정안]

현재 국가배상법에 따라 전사·순직 군경 본인 및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가 일체 금지되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 고유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


“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합니다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두 가지 결정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열심히 찾아 제대로 고치겠습니다.
”
법무부장관 한동훈
법무부

주요 국정홍보 ㉖ (국가보훈부·재외동포청 출범)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윤석열 대통령, 재외동포청 출범식 기념사 6.5.

대한민국정부

재외동포청 출범
750만 재외동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해외 동포 여러분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네트워크입니다.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를 보호하고 지원하며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요 국정홍보 ❼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만들겠습니다)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주요 국정홍보 ㉘(스마트폰으로 신용대출 쉽고 빠르게)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금융위원회

정부는

고금리 시기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정책' 마련에 주력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이자부담을 줄이고,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 마련할 것"

-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2023.2.15.)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관련 주요경과

- 2022년 11월 ● 민생금융 안정화 대책 당정협의(6일),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8일)
- 2023년 1월 ● 금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대통령 보고, 20개 중점 추진과제 포함
- 2월 ● 대통령, 은행 과점해소 및 국민 이자부담 경감방안 마련 지시
- 3월 ● 은행권 제도개선 실무작업반 발족, 주담대 대상 구축 발표
- 5월 ● 금융위원장, 대환대출 인프라 사전점검 간담회 주재

금융위원회

5월 31일부터 소비자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대출

-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기존 대출 중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
- 기존 대출을 서민·중저신용자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
  * 새희망홀씨대출, 징검다리론, 새희망드림대출, 사잇돌중금리대출, 햇살론 등
-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의 경우 7월 1일부터는 조회, 갈아타기 가능

※ 연체대출 또는 압류 및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 등은 서비스 이용 시 갈아탈 수 없음이 표시될 예정

금융위원회

「대환대출 서비스」 상황별 이용 방법(예시)

상황 1 :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 조건을 비교하고 싶어요!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앱(5월 31일 기준)

: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상황 2 : 대출을 옮기고 싶은 금융회사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1 금융회사 앱 접속
로그인

2 대환대출 메뉴 ▸기존 대출 내역 조회
휴대전화 본인 인증

3 갈아탈 대출상품 꼼꼼히 비교
금리, 상환방식 등

4 나에게 맞는 대출상품 선택
대출계약 실행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앱(5월 31일 기준)

- (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저축은행) JT저축은행, KB저축은행, 다올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캐피탈) BNK캐피탈, DGB캐피탈, JB우리캐피탈, NH농협캐피탈

* 앱 이름은 금융회사명과 다를 수 있음 (예 : 신한은행 – 신한SOL)
** SB저축은행(6월 2일), 현대캐피탈(6월 1일) 추가 지원 예정

금융위원회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시간

은행 영업시간인

09:00 ~ 16:00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초기에는
실제 서비스 이용시간을 이보다 단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

* SC제일은행 · 토스뱅크 · 현대캐피탈의 경 : 15:30까지,
수협은행 : 14시까지(마이너스 통장 대환 시 한정)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가능 횟수

- ☑ 서비스 이용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 ☑ 다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을 실행*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있습니다.

* 대환대출을 통해 갈아탄 경우를 포함

** 대출이동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기존 오프라인 방식 대환은 미해당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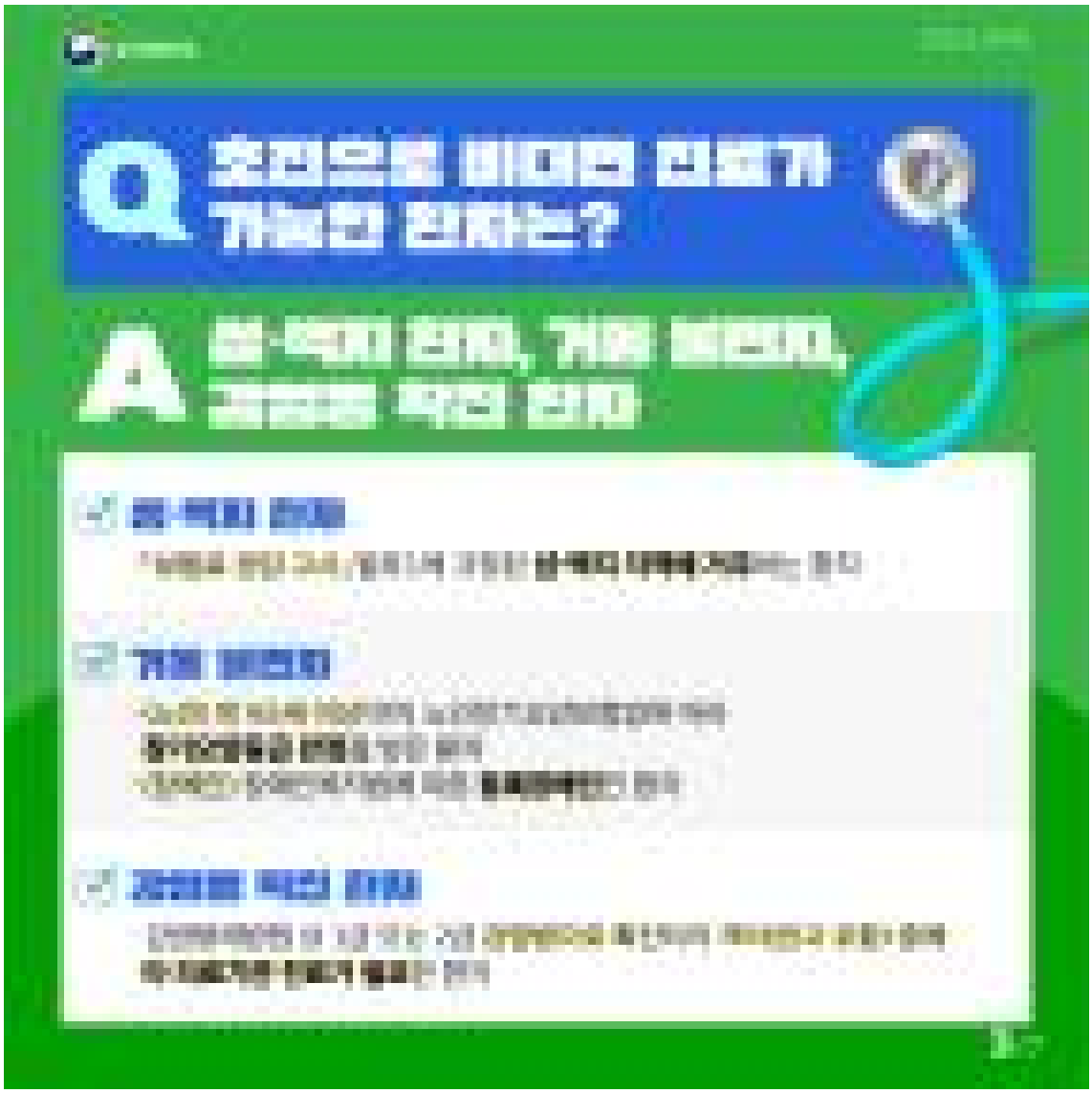
스마트폰에서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우시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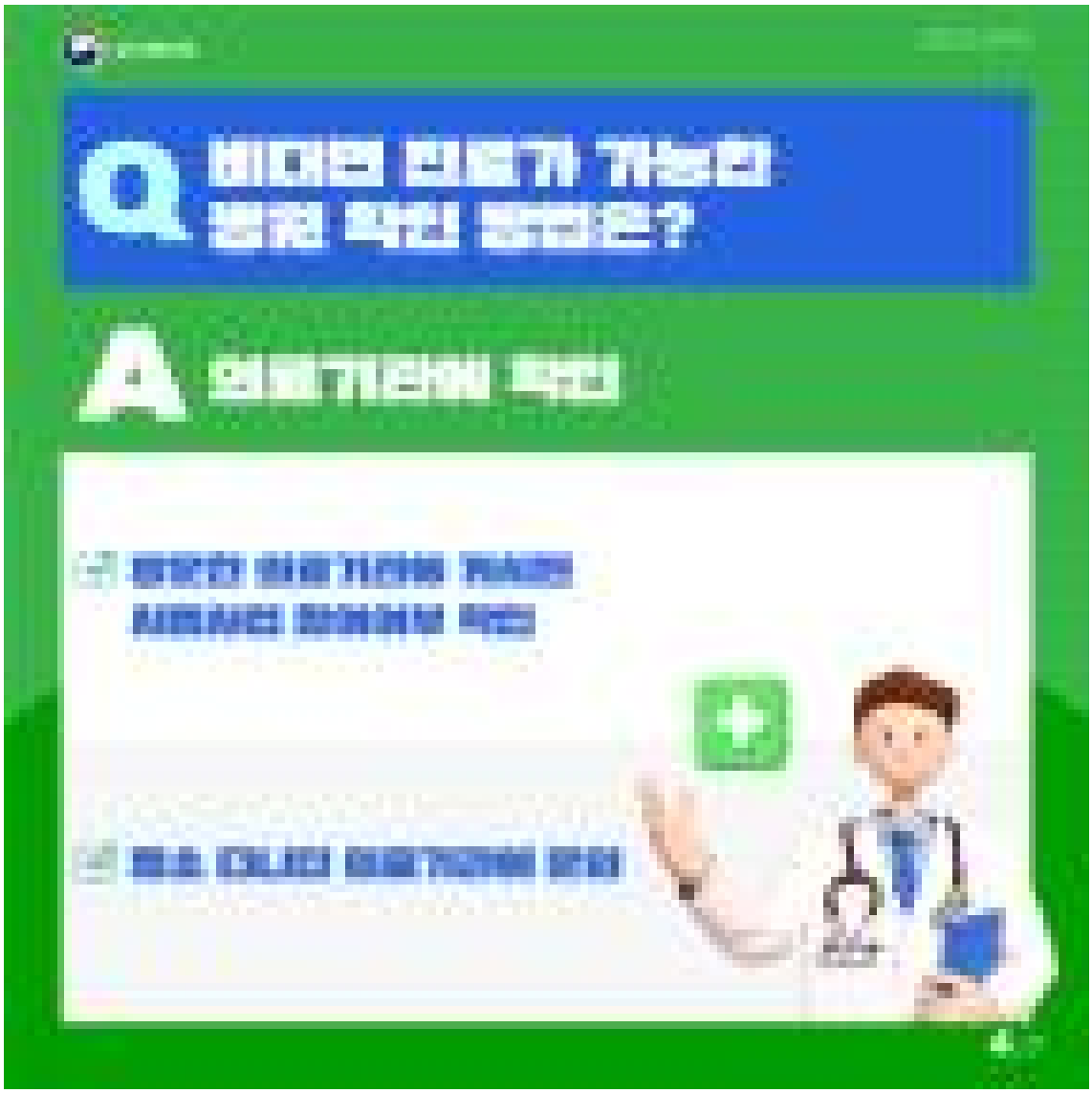
-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의 경우, 주요 은행 등의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환대출 인프라의 핵심은 금융회사 간 상환 처리를 전산화한 대출이동시스템으로, 새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나의 기존대출을 확인하고 상환하는 절차 역시 간편해집니다.
- 새로 대출을 받을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한 번만 방문하여 그 자리에서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갈아타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등, 대면 방식의 대환대출 역시 편리하게 바뀔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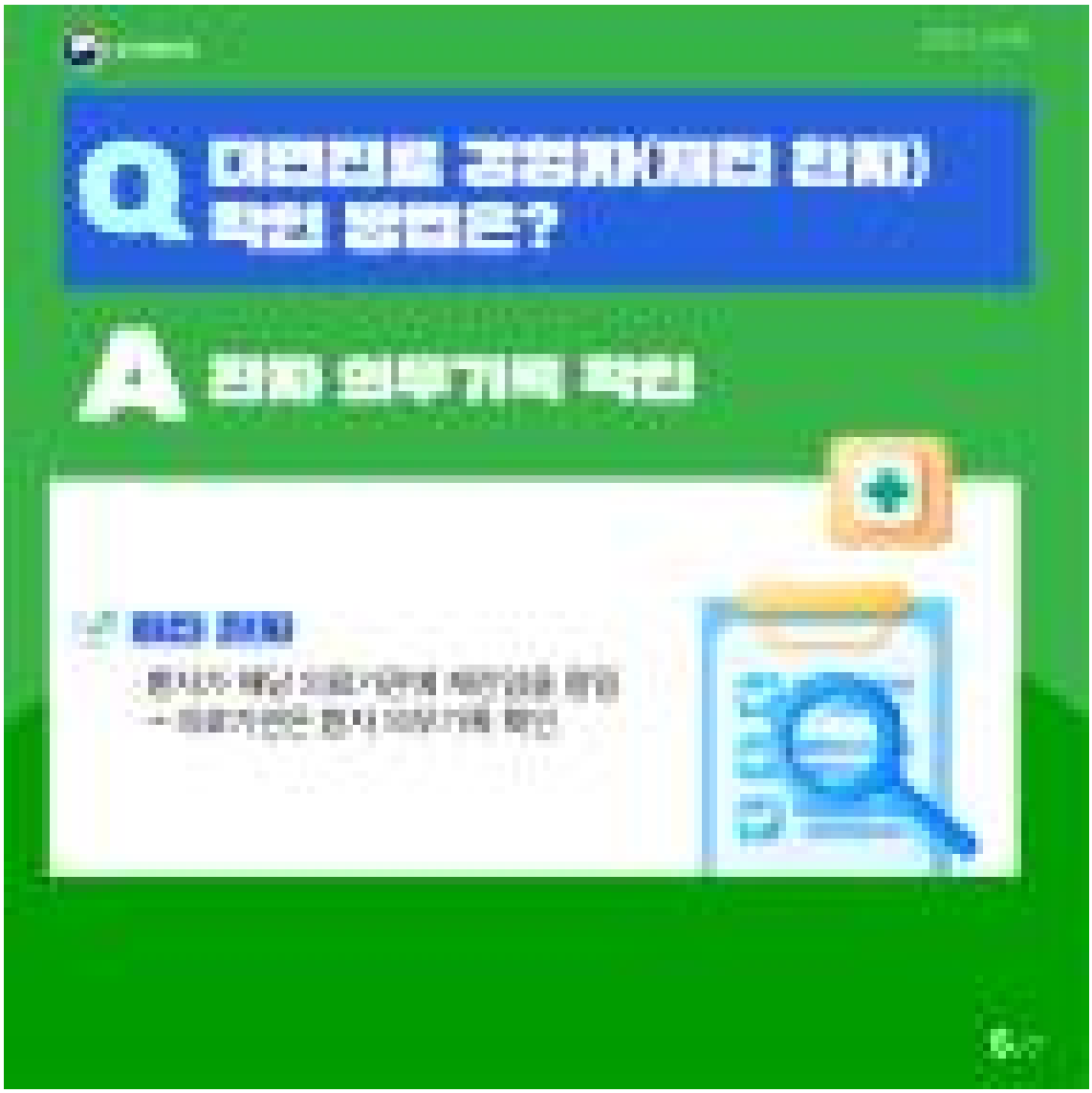
* 이전에는 금융회사 두 곳의 영업점에 모두 방문, 갈아타기 완료까지 1~2영업일 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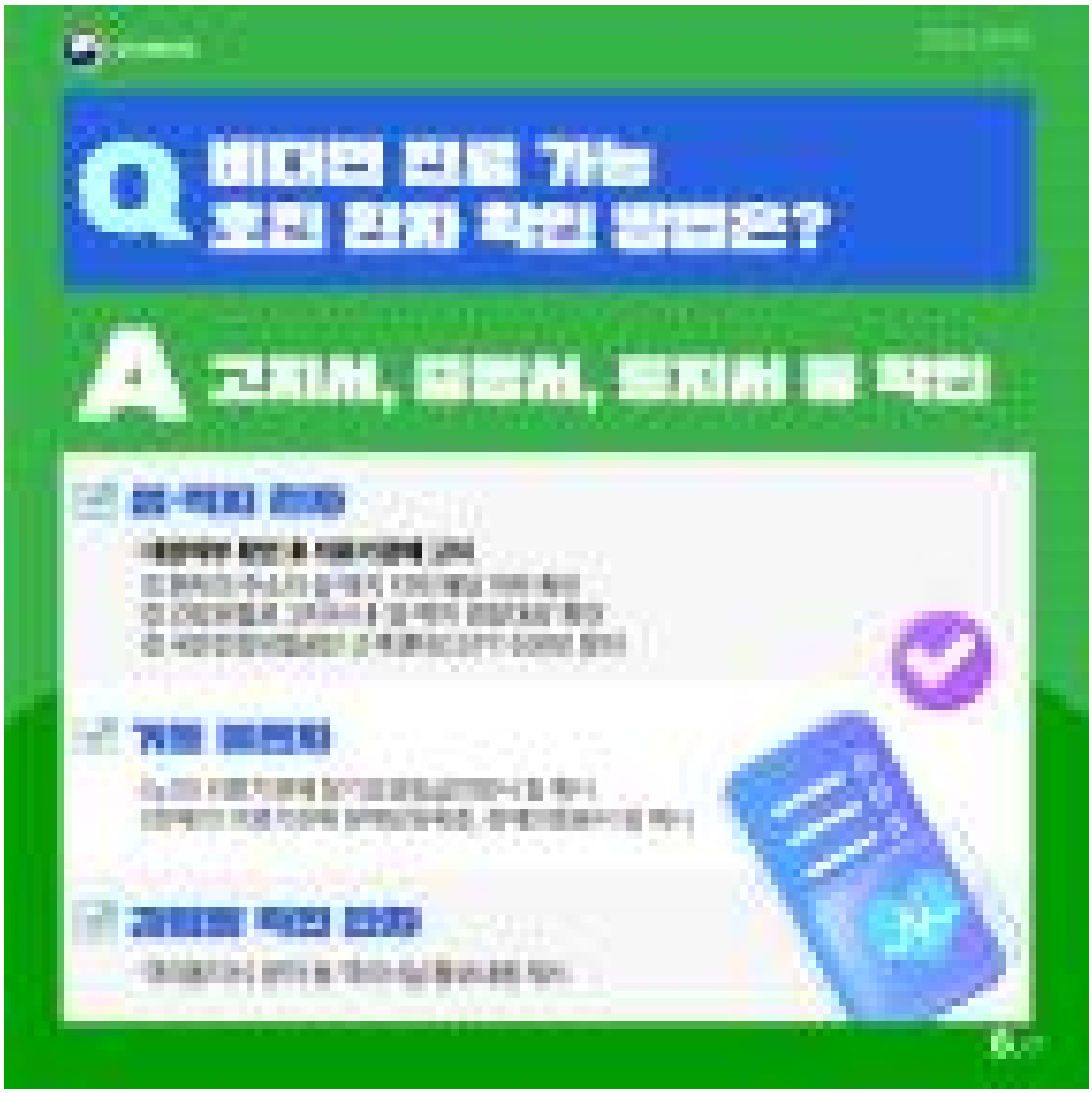
주요 국정홍보 ㉙(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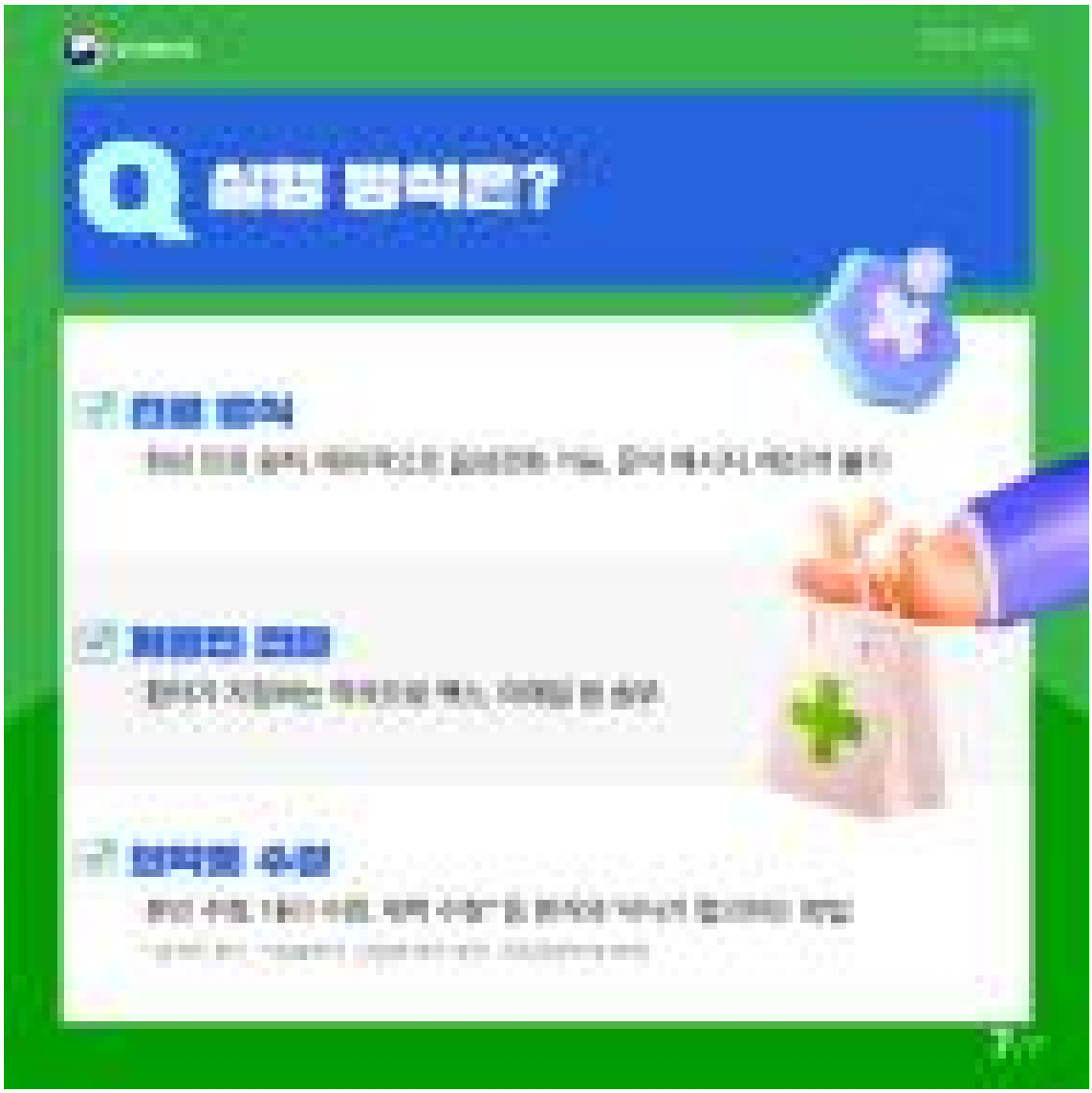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주요 국정홍보 ㉚(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법무부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5.30.(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파종·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 왔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지자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건의에 따라 법무부는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회에 한 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이미 입국하여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배정된
상반기 계절근로자 (26,788명, 124개 지자체)에 더해
5월 24일 추가로 12,869명을 배정(107개 지자체)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어촌 구인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이탈 방지 및 적응 지원**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계절근로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발표한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법무부

주요 국정홍보 ❸(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조성)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

사업지원서비스 기업 집적 활성화

산업시설용지, 핵심 입주용지에 **법률, 회계, 컨설팅** 등 **서비스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 개정
개발 및 관리지역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첨복단지 입주 및 관리기본계획」 등 개정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클러스터 전용 **스케일업 TIPS** 프로그램 운영

운영사 선정시 클러스터 소재 운영사에 **가점**을 **부여**하고
지원대상 선정시 **클러스터 입주기업 배정 물량 확대***

* 스케일업 TIPS 클러스터 기업 비중 : ('23) 22% → ('24) 30% → ('27) 40%

클러스터 내 **앵커기업 - 스타트업**간 **협력**시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가점 부여** 등 우대

(대·중견기업 등)

* **스타트업**이 대기업과 **협업** 가능한 **사업모델** 및 **기술개발 과제**를 제안하고, **정부**는 사업화(PoC) 지원(**최대 1억원**), 기술개발 연계 지원(**최대 1.2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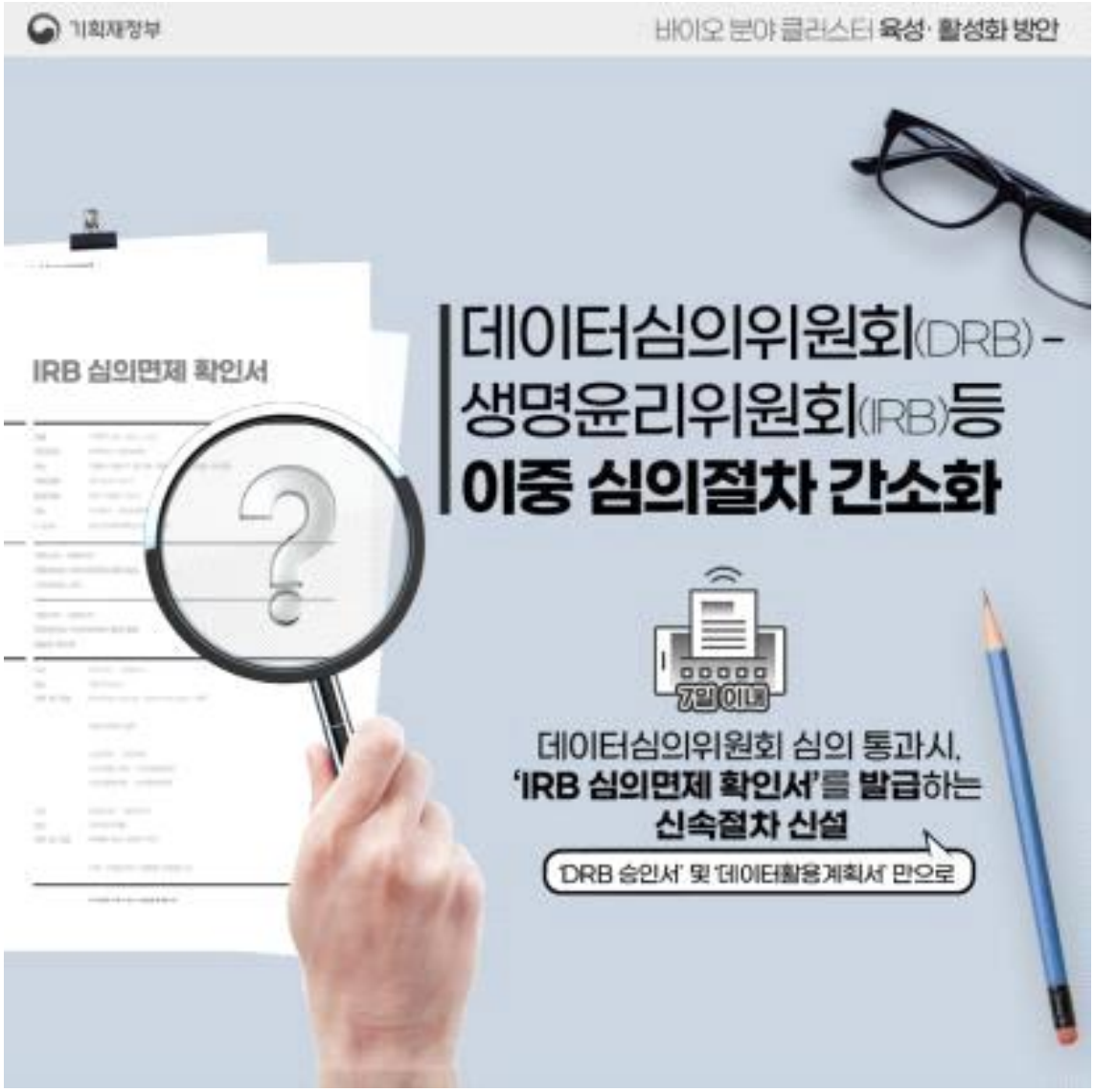
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률·회계서비스 바우처 지원**, **네트워킹** 프로그램 **신설** 등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 포함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 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포함
(예: 동물세포 배양·정제기술 등)

보건의료데이터 **수요·공급을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탐색·매칭·분석 지원,
가명처리 적정성 등 **모니터링**


IRB 심의면제 확인서
데이터심의위원회(DRB) -
생명윤리위원회(IRB)등
이중 심의절차 간소화
7일 이내
데이터심의위원회 심의 통과시,
'IRB 심의면제 확인서'를 발급하는
신속절차 신설
'DRB 승인서' 및 '데이터활용계획서' 만으로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
시장경제에 활력을 주고,
민간중심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여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를
육성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주요 국정홍보 ㉒(블루카본 추진전략 발표)

(자료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 ☎ 044-203-2912)